

# 빛 쪼들린 月 150만원 봉급자, 부모 부양때 생계급여 혜택

### 기초생활보장제 대폭 개편... 내년 10월 시행

## 말 많던 부양의무 기준 완화... 수급자 80만명 늘어

#1. 광주시 북구의 한 임대주택에 홀로 사는 이모(56)씨는 지난 1월 수급자 자격을 상실했다.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직장인 아들(41)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것이다. 그러나 김씨 아들은 카드빚에 쪼들려 부모에게 생활비를 줄 형편이 못 된다. 내년엔 수급 체계를 바꾸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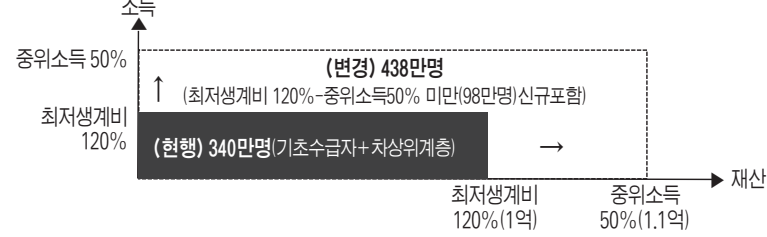
그렇게 되면 월 150만 원 정도 버는 아들은 부모를 지원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돼 김씨는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 남편 김모(68)씨와 아내 박모(63)씨는 광주시 서구의 한 단칸방에서 단둘이 산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다. 이들 부부는 소일을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가량 받는다. 남편 앞으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약 10만 원을 합해 이 부부의 월 소득은 40만 원 안팎.

월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월세가 특히 고인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3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떨어졌다. 김씨가 30여 년 동안 저금한 돈이 5000만 원이나 되고, 아직 월수입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면 이 부부는 월세를 지원하는 조건에 해당돼 주거 부담은 덜게 된다.

#### ■ 빈곤정책 대상 규모

(현행) 수급자(A)+차상위(B+C)=340만명 → (변경) 중위소득 50%이하 438만명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세대조사\*10, 보건사회연구원원조사
- 중위소득 50%이하의 중산층 규모 추계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구동원화지수(제곱근 방식) 활용\*10, 기계동원조사 원조

빈곤층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대상이 지금보다 80만 명 가량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를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던 방식도 각 가정의 개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급여 체제로 바뀐다. 또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약 440만 원을 넘어야 따로 사는 가족 1명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우는 등 말 씀 많은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심의, 확정하고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관리·지원 대상으로 삼는 빈곤층의 범위가 중위소득(4인 가족 384만 원) 50% 이하의 430만 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정부의 빈곤정책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00~120% 수준의 차상위 계층을 합쳐 340만 명 정도였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만 따지면 수급자가 현재 140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80만 명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를 밑돌 경우 무조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지만, 앞으로는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 대상자를 따로 선정하기 때문에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광주의 한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최근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오는 10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체적 기준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일단 피복·교통·식품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현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0~5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등을 새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

따르면서 논란이 많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 선이었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인 가족이 따로 사는 1명의 빈곤

가족을 두고 있다면, 지금은 소득이 392만 원만 넘어면 빈곤 가족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적어도 441만 원(중위소득 384만 원+1인 최저생계비 57만 원)을 웃돌아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나머지 잠재적 빈곤층에 대해서는 주(主)소득자 사망·질병·화재 등 가정이 위기에 닥쳤을 때

정부가 도움을 주는 긴급 지원제도와 장애인·한 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정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개편해 복지·고용·보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사회복지인력 7000명을 내년 3월까지 조기 확충하는 등의 새로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계획도 제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경기 안 좋는데 광주·전남 기초수급자는 매년 줄어

### 1년새 2만명 탈락...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지적도

광주·전남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연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광주 6만6844명, 전남 8만6966명

등 총 14만765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 수급자 수는 지난 2010년 17만1557명(광주 6만5476명·전남 10만6081명), 2011년 15만962명(광주 6만2421명·전남 9만6641명)으로 줄었으며 지난 2012년 또다시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기초수급자는

2005년부터 6년간 150만명 대를 유지하다 2011년 140만명대로 떨어졌고 1년 만에 다시 139만명이 됐다.

매년 수급자가 준 것은 본인이나 가족 등 부양의무자의 신규 소득 발생 등 자격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수급자가 준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경기가 나빠도 수급권 박탈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연계 관리하면서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에 복지부는 복지급여 확인 조사를 거쳐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13만9760명(9만9117가구)에 대해 8월부터 각종 보장을 중지했다.

/이종행기자 golee@

## 참여연대 “새 기초생활보장제, 근로자 빈곤 우려”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단순히 수급권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근로능력자를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가난한 근로능력자에게 자립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최저생계를 담보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실업률

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수급 박탈은 이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 완화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바른 방향이지만, 대다수 비(非)수급 빈곤층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 명 가운데 어느 정도를 제도권이 포괄할지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꺼리거나 부양 수준이 미흡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에 정부가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내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공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 금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평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상가 주택

-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물2890㎡ 감정가129억 최저가20억
-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물3090㎡ 감정가172억 최저가20억
- ▷ 서구 쌍충동 2층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물198㎡ 감정가15억5천만 최저가3억8천만
- ▷ 영광읍 녹서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물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 단독주택

-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물203㎡ 감정가14억3천만 최저가2억4천만
-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물70㎡ 감정가2억 최저가1억4천만

####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126억 최저가15억
-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 토지매매

- ▷ 회송읍 연양리 자연녹지 대지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임대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1층 92평  
2층 72평  
시설완벽!  
권리금 없음  
모든업종가능

010-3701-4767

###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